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2025. 2. 19.

중장기전략위원회

순 서

I . 추진배경	1
II . 한국경제의 現주소 및 미래 모습	3
1. 우리 경제 · 사회 도전요인	3
2. 미래 변화의 핵심동인 및 영향	5
3. 미래세대의 목소리 : 2060 대한민국의 모습 ...	9
III . 중장기 전략 기본방향	12
IV . 중장기 전략과제	15
1. 新고령층 활약 지원	15
2.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17
3.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19
4.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22
5.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25
6. 미래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27
7.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29
8. 혁신 · 거점 주도형 지역 발전	31

I. 추진배경

①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통해 경제 선진국에 진입

- '60년 이후 국민소득이 400배 이상 증가하며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소득3만불·인구 5천만명 이상) 진입(17)하는 등 압축성장 달성
 - 높은 기술수준을 갖춘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개방적 경제정책을 통해 세계시장과 긴밀히 통합**

* 제조업경쟁력지수(UNIDO, '20) : (1위) 독일 (2위) 중국 (3위) 아일랜드 (4위) 한국

** 전세계 GDP의 85%에 이르는 FTA네트워크 구축('24), '23년 수출액은 0.63조불로 세계 7위(IMF)

-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성장한 슈퍼스타이며, 한국의 경제발전사는 모든 개도국의 필독서라 평가(WB, '24.8월)

② 성장이 정체되고 미래 변화 속도·파급력이 증대되며 위기론 부각

- 선진국형 저성장 단계 진입 및 경제·사회의 불확실성·복잡성 증대로 과거의 성장방정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불안 팽배
- 중장기 관점 없이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변화에의 적응·극복 문제 등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 재설계해야 할 시점

③ 위기 대응 및 체계적 미래 준비를 위해 “지금” 중장기 전략을 제시

- 중장기 전략은 미래 화두를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촉매로, 향후 수립될 부처·분야별 정책 제언 역할
- 청소년·청년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미래세대 관점에서 30년 이상(한 세대) 시계로 전략을 검토
- 모든 과제를 망라하는 백과사전식 방식이 아닌, 미래 핵심 변화 동인을 중심으로 한 핵심 전략과제 마련에 집중

☞ 미래세대가 바라는 비전 구현을 위해, 미래 위험·불안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전략 마련

【참고 1】 중장기 전략, 어떻게 수립하였는가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로,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제공

* 민간의 과감한 정책 제언 반영을 위해 기존 민·관 합동 위원회에서 민간 위원회로 개편('21.4월), 현재 제6기 위원회 활동 중('23.7월 출범)

① 분과위, 기초연구 등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

○ (위원회 논의) 중장기추진위원회 전체회의, 분과위 회의 등 민간위원 논의를 통해 전략 방향성 및 정책과제 구체화

○ (기초연구)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23년 종합연구*('23.4~12월), '24년 추가연구 필요과제에 대해 개별연구** 진행('24.2~8월)

* 산업혁신, 인재혁신, 국가안전망 확충, 거버넌스 개혁의 4개 전략에 대해 미래형 신산업구조 육성,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16개 과제 연구

** 지역 균형발전, 저탄소 전환, 미래형 인재 육성 등 13개 과제 연구

○ (공론화) '24년 3차례의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세부주제별 정책과제(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추진

* 인구위기 대응(4.29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10.7일), 인재 확보 및 복지·재정 지속가능성 제고(11.18일) 등 주제로 개최

▪ 미래전략 컨퍼런스(12.11일), 전문가 간담회(30여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전략에 반영

②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래세대 의견 청취

○ (의견 조사) 정책수혜자인 미래세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7~8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8~11월) 등 진행

* 경제전문가(331명 응답) 및 일반국민(1,000명 응답) 대상으로 실시

○ (현장 목소리 청취) 청년 등 미래세대 인터뷰*, 현장방문** 등 통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청취

* 「미래세대와의 대화」(부총리 주재, 9.30일), 미래전략 컨퍼런스(12.11일) 등

** 해외인재 유치(7.10일, 출입국외국인청), ESG 경영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확산(8.30일, 대한상의), 우수인재 확보(10.7일, 대한상의) 등

Ⅱ. 한국경제의 現주소 및 미래 모습

1

우리 경제 · 사회 도전요인

1

성장잠재력 하락과 혁신 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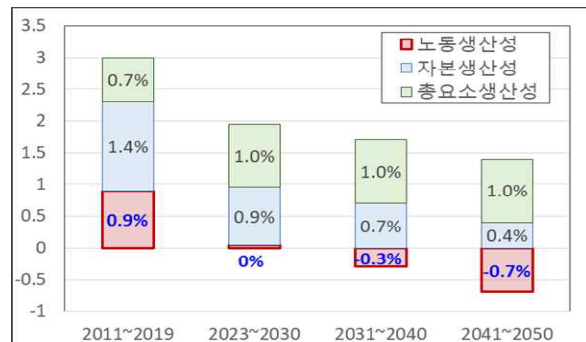
- 1990년대 7%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2%대 도달
 -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 영향이 확대되며 잠재성장률은 '60년 0%대까지 하락 전망 → 저성장 고착화 우려

잠재성장률 및 1인당 GDP 증가율 전망



* 자료: 통계청, KDI('24)

노동·자본 생산성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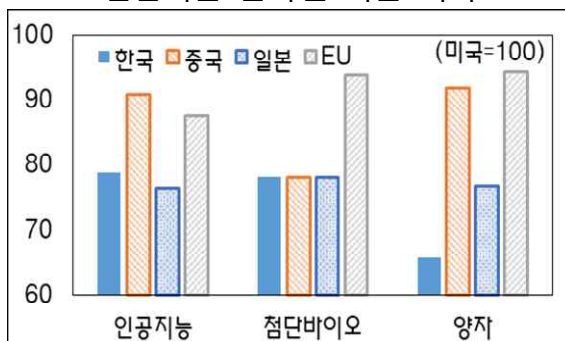
* 자료: KDI('22)

- 모방·추격형 경제에서 혁신·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지체되면서 총요소생산성도 급격히 저하*

*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p, KDI, '22) : ('91~'00) 2.3 ('01~'10) 1.9 ('11~'19)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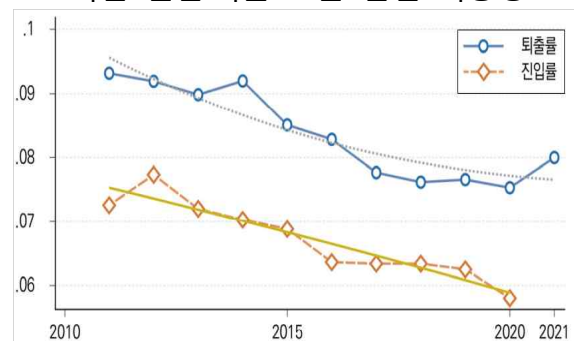
-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선진국과의 격차 확대 및 중국 등 후발국 추격으로 샌드위치 상황을 넘어선 기술 위기론 부각
- 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 발휘가 정체되며 경제·산업 역동성도 저하

첨단기술 분야별 기술 격차



* 자료: 과기정통부('22)

기업 진입·퇴출로 본 산업 역동성



* 자료: 제조업 대상, 산업연구원('23)

2

격차 확대에 따른 경제주체 기대·의욕 저하

□ 소득분배는 점진적 개선 추세*이나, 소득양극화 불안은 심화

* 지니계수 [가계동향(도시 2인이상 가구) ('98)0.29→('15)0.27 / [가금복(전체가구) ('17)0.35→('22)0.32]

○ '10년대 이후 소득이동성*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세대내·세대간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도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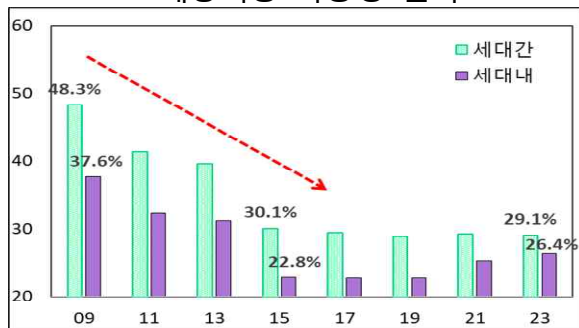
* 소득이동성 추이(기준연도 대비 %, KDI 이영욱, '23): ('16) 30 → ('19) 27

**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조사(통계청 사회조사): (세대간) ('09) 48.3 → ('23) 29.1
(세대내) ('09) 37.6 → ('23)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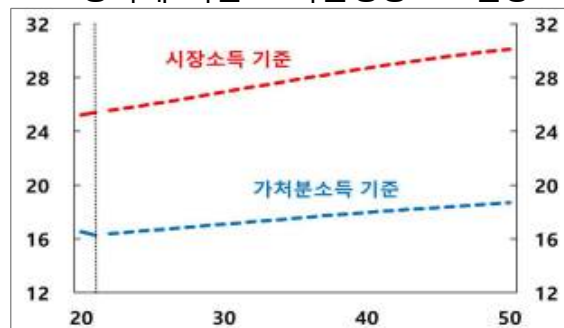
○ 은퇴전 소득뿐 아니라 노후 소득 격차*에 대한 우려도 상당

* 은퇴시점 도래로 가구간 근로사업소득 격차 축적된 보유자산 격차로 임대소득 불평등 등에 기인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도¹⁾ 전망

1) 타일지수(클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 기준
* 자료: 한은('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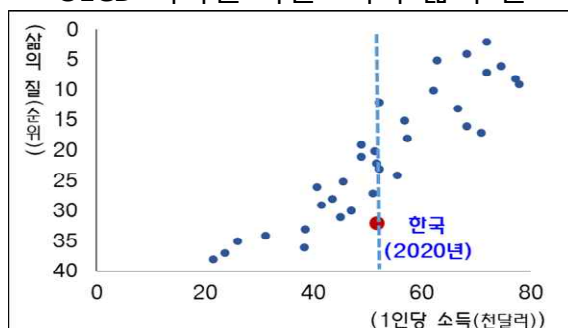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성과 대비 낮은 수준

* OECD 삶의 만족도 지수는 '20~'22년 5.95점으로 OECD 평균(6.69점) 대비 낮으며, OECD 38개국 중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3개국에 불과

○ 소득·일자리 불안정, 불공정·불평등한 소득분배 등이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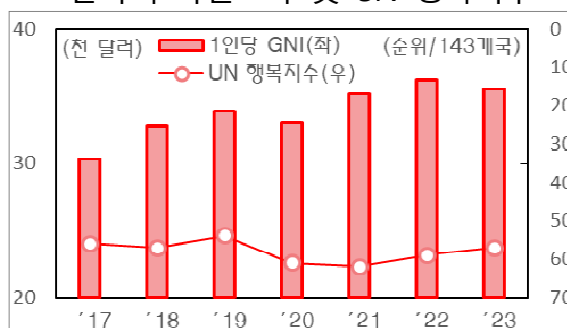
* 행복 취약계층은 고령층, 저소득층, 무직·임시·근로자 등 불평등 문제와 관련(국회미래연 '22)

OECD 국가별 국민소득과 삶의 질



* WB, OECD('20)

한국의 국민소득 및 UN 행복지수



* WB, UN('23)

2

미래 변화의 핵심동인 및 영향

1

인구구조 변화

① 저출산·고령화는 전세계적 트렌드이며, 우리도 축소사회 既도래

- 63개국에서 인구 감소, 전세계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32년 감소세 전환(UN, '24) 등 저출산·고령화는 전세계적 화두*

* OECD, UN 등 국제기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변화에 주목하며 여성·고령층 등의 적극적 경제활동, 연금·의료 관련 재정안정화, 세대간 포용성 등을 강조

- 우리는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 + '24.12월 초고령사회 진입

- 출산율*은 '60년 1.08명 수준 전망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60년 고령자 비중은 44.2%까지 상승

* 합계출산율(명): ('10) 1.22 ('15) 1.24 ('23) 0.72 ('30) 0.82 ('36) 1.02 ('60) 1.08

** 고령사회→초고령사회(고령자비중 20% 이상) 도달년수: (佛)29년 (美)15년 (日)11년 (韓)7년

② 축소사회 도래는 생산성, 재정부담 등 경제·사회적 전반에 영향

- 총인구는 '21년 감소 전환*했으며, 생산연령인구는 '19년을 정점으로 '72년 현재의 절반**이 되며 노동력 감소 심화***

* 총인구(만명): ('19)5,176 ('20)5,184 ('21)5,177 ('23)5,171 ('30)5,131 ('60)4,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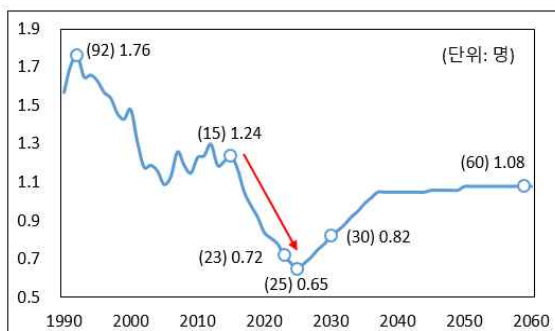
** 생산연령인구(15~64세, 만명): ('19) 3,763 ('20) 3,593 ('23) 3,657 ('30) 3,417 ('60) 2,069 ('72) 1,658

***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로 9년 이내 인력부족 문제 본격화 전망(한경협, '24.5)

- 구매력 낮은 고령층 비중 증가로 소비 감소*, 자본생산성 저하 (노동/자본 비율↓)로 투자 위축 등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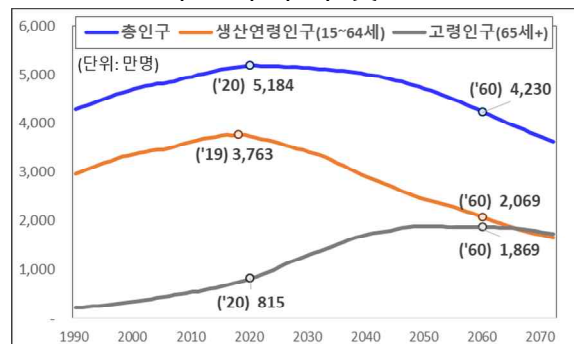
* '20~'35년 고령화로 인한 소비감소: 연평균 △0.7%, 누적 △10.6% (한은, '22)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통계청

인구변화 추이 및 전망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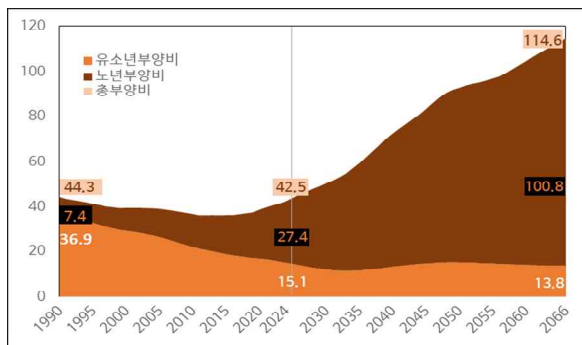
- 노년부양비는 급등해 '66년 100.8명('24년 27.4명)으로 증가하며 GDP 대비 사회보장 재정 비중*은 '24년 대비 '65년 74% 증가

* 사회보장 재정(GDP대비, %, '24, 복지부) : ('24) 15.5 → ('40) 20.3 → ('65) 26.9

-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을 넘어 지역소멸이 심화되고, 출생·거주지에 따른 기회 불균형도 확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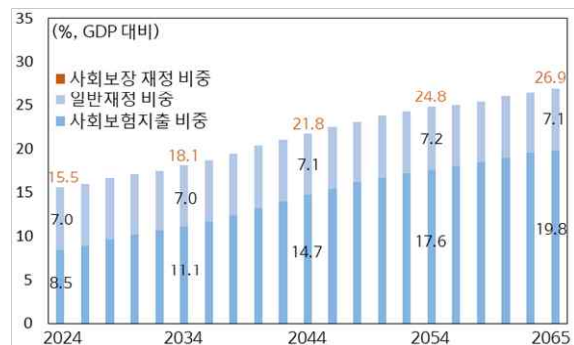
* 소멸위험지역(20~39세 여성/고령인구1 미만 '21): ('23) 118개(전체 시군구 52%) → ('47) 229개(100%)

총부양비 변화 및 전망



* 자료: 통계청

사회보장 재정 전망



* 자료: 복지부

2 기술 · 산업 대전환

① 쏠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 신산업 선점경쟁 격화 등 산업지형 빠르게 재편

- 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산업·경제 지형이 급변 → 미래기술·신산업 분야 선점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

* 한국이 AI 성공적 도입시 3년내 GDP의 최대 약 14% 증가 기대(베인앤컴퍼니)

* (예) 美 S&P 500 지수에 포함된 총 기업가치의 25% 이상을 2000년 이후 IT 기술 기반으로 혁신에 성공한 기업이 차지(2000년 당시 10% 이하)

- 美, 中 등 주요국 중심으로 AI·첨단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 패권 경쟁* 및 인재확보 총력전**에 돌입

* (美) 「반도체 육성법」으로 AI·반도체 등 \$2,800억 투자('22.7월~),

(中) '디지털 중국 건설규획' 발표('23.2월), (日) '디지털청' 신설('21.9월) 등

** (美) 「반도체 육성법」 제정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132억 투자('22~'27)

(EU) 'Horizon Europe 마리퀴리 액션'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66.0억 투자('21~'27)

(日) 유망고급인재 확보 위해 '미래창조인재 제도(J-Find)',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신설('23.4월)

2 미래 선도산업 육성, 산업 맞춤형 인적자원 확충 중심으로 구조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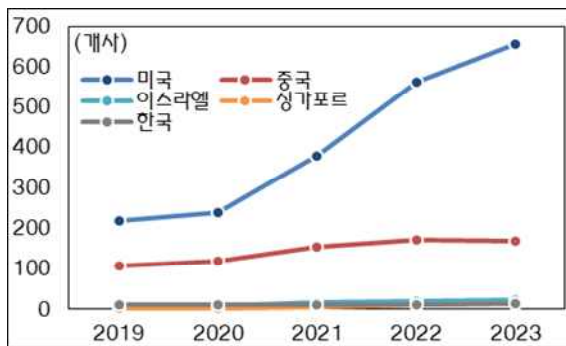
- 신속한 추격자(fast follower) 중심에서 선발자(first mover)로서 혁신 선도기업*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중

* 전세계 유니콘 기업 비중('23, 한경연) : (기업수 기준) 美 54.2% 韓 1.2%

- 디지털 전환은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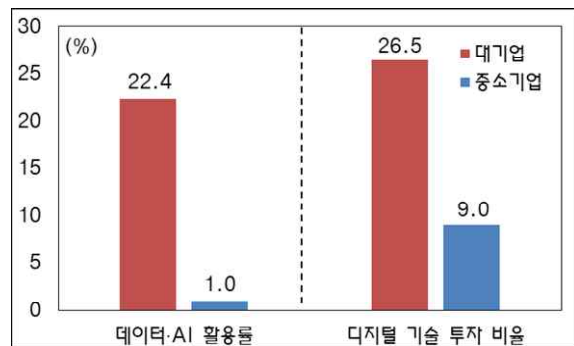
* 디지털 기술의 높은 투자비용 대비 낮은 체감, 불명확한 데이터 주체화, 데이터 활용모델 부재 등으로 기업 규모별 격차가 현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주요국 유니콘 기업 현황



* 자료: 한국경제인연합회('23)

기업규모별 디지털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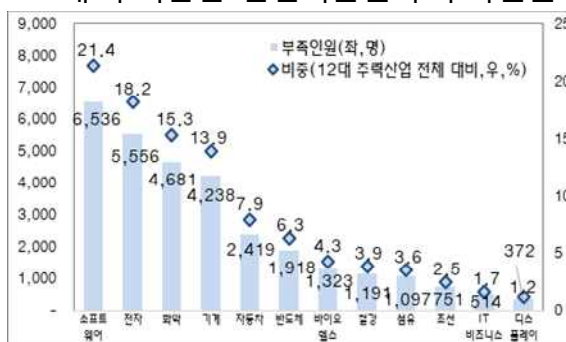
* 자료: 산업부-KPC 설문조사('21)

- R&D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창의인재 육성·유치·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산업 수요에 부합한 인재 육성 요구 확대*

* 12대 주력산업 부족인원(30,596명)은 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의 78.1% 차지

- AI의 노동력 보완·대체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도 예상

12대 주력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 자료: 산업부('2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결과)

AI의 노동시장 영향 전망

IMF	전세계 고용의 약 40%가 AI에 노출, 이중 절반이 AI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
산업연	국내 전체일자리의 13.1%인 327만개 일자리가 AI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
골드만삭스	생성형 AI 활용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10~15% 제고 가능

① 기후 변화가 현실화되며, 新기후체제 출범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강화

- 온실가스 감축 목소리 확산, 新기후체제(파리협정, '20~)로 전환 등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은 글로벌 아젠다로서 강조

* ('22.7월 UN총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human right to a healthy, sustainable environment)'을 보편적 인권으로 최초로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

- 기후선도 국가·기업 주도 탄소가격규범(CBAM* 등), 비가격 규범(공급망실사, RE100 등) 등이 그린 무역장벽으로 확산

*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역내 생산품의 탄소비용과 같은 수준의 탄소비용을 역외 수입품에게도 부과

- UN 중심으로 보다 높은 2035 NDC 설정에의 국제적 요구 증대* 전망

* IPCC 보고서('23.3월) : '19년 대비 '35년 전세계 평균 △60% 탄소감축 필요

- 주요국을 중심으로 산업전략적 측면*에서 탄소감축 및 녹색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격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 증대

* EU 그린딜 산업계획, 日 그린혁신기금 등 추진 중

** (드라기 보고서, '24.9월) "EU의 야심찬 기후 목표와 이행계획이 일치한다면 탈탄소화는 유럽에 기회가 될 것...청정기술 등 탈탄소화 산업을 아우르는 계획 필요"

② 탄소중립 관련 각국의 이행압박, 기술경쟁에도 우리 여건은 절대 불리

- 수출품 중 에너지多소비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구조*상 新기후규범 시행 본격화**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 에너지다소비 업종 우리나라 수출품목 비중(%) : ('19) 30.2 → ('23) 32.0

** (EU CBAM) 시범기간('23~'25)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CBAM 인증서 구매의무) (RE100) 유럽·북미 지역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5~'27년을 목표연도로 설정 (공급망실사) '28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개시

- 녹색산업 후발주자로서 낮은 저탄소 기술력*을 보완하고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유인체계 확립 요구 증대

* 저탄소 기술력(%), '20, 국가녹색기술연구소: (美) 100, (EU) 96, (日) 90, (韓) 80

⇒ 美신정부 이후 각국 기후정책 변화 등 고려한 속도 조절 요구되나, 장기적 시계에서 방향성 인식 및 통상·산업 등 전략적 대응 필요

◇ 미래 위험·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교육 기회가 보장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은 대한민국

1 소득과 건강 불안이 해소되고 활력있는 삶

미래세대 목소리

- ☞ 설문조사 결과,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생활 불안'을 전문가(75.5%), 일반국민(53.6%) 모두 가장 큰 미래 개인적 불안요인으로 응답 1)
- ☞ '24년 65~79세 고령자의 57.2%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등 취업의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희망 사유는 생활비 보탬(52.0%), 일하는 즐거움(37.7%) 순 2)
- ☞ '24년 사회조사 결과, 부모님의 노후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16.4%로 2년 전보다 3.8%p 증가 3)
- ☞ "미래 부양부담과 연금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빠르게 논의해야 해요." 4)

- 나와 내 부모의 부양 부담에 대한 불안이 없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삶
-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사회 활동을 지속하며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공동체·지역 사회·경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삶

2 창의·혁신 역량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경제

미래세대 목소리

- ☞ 청년세대들은 미래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 관련 저출생·고령화 95.7%, 기후변화는 92.4%, 기술·산업구조 변화 90.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 5)
- ☞ 청년 취업자의 14.4%는 현재 자신의 일이 가까운 미래에 기술 변화로 사라질 것이라 인식 5)
- ☞ "청년들이 자신의 꿈만 쫓기에는 우리 사회가 녹록치 않습니다.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6)

1) 중장기전략 설문조사(KDI, '24.7~8)

2) 2024년 고령자 통계(통계청, '24.9)

3) 2024년 사회조사(통계청, '24.11)

4) 미래세대와의 대화, 청년 심층 인터뷰(기획재정부, '24.9)

5)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23)

6) 미래전략컨퍼런스, 청년 인터뷰(기획재정부, '24.12)

- 불확실성 下 민간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활발히 일어나고, 정부는 민간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경제
- 세계 최고 수준의 창의·혁신 인재가 모여, 글로벌 산업·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개방 경제
- 성실한 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 가능한 기초체력을 갖춘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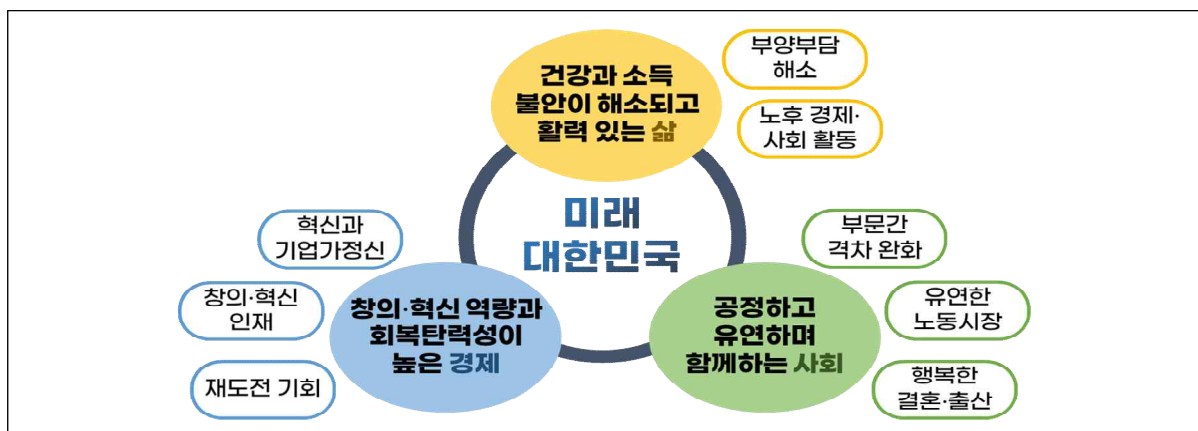
3] 공정하고 유연하며 함께하는 사회

미래세대 목소리

- ☞ 청년들은 자녀 세대의 소득이 부모 세대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대물림 인식에 대해 소득불평등 상태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⁵⁾
- ☞ MZ세대는 여가시간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⁷⁾
- ☞ '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10대는 33.7%, 20대는 39.7%이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금부족(31.3%), 출산·양육 부담(15.4%) 順 ³⁾

- 부문간 격차가 완화되고 계층간 이동성이 높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인 사회
-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통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평생 학습·창업 기회가 주어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회
-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사회

키워드로 본 미래세대 목소리



7)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세대별 비교 분석(국회미래연구원, '24.7)

【참고 2】 중장기전략 설문조사 결과

◆ 중장기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일반국민 총 1,331명을 대상*으로 미래 위험과 불안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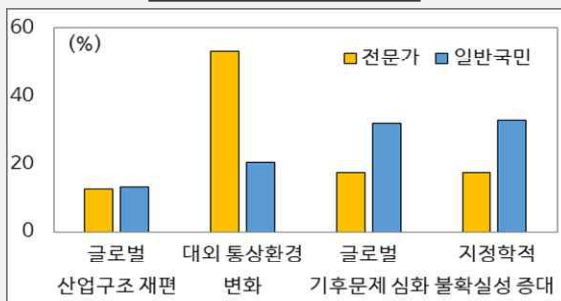
* (1차, 7.30~8.1) 경제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331명 응답
(2차, 8.16~8.22) 전국 만18세 이상 일반국민 대상 전화조사, 1000명 응답

□ 통상환경 변화, 기후문제,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불안 등을 향후 20년內 주요 위험·불안요인으로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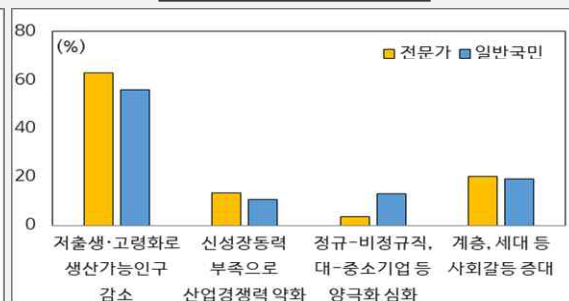
① (대외위험요인) 전문가는 '공급망 재편·그린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53.2%), '글로벌 기후문제 심화'(17.2%) 順
- 일반국민은 '지정학적 불확실성'(32.5%), '글로벌 기후문제 심화'(31.7%) 順

② (대내위험요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전문가(62.8%), 일반국민(55.8%) 모두 가장 큰 대내위험요인으로 지적

대외위험요인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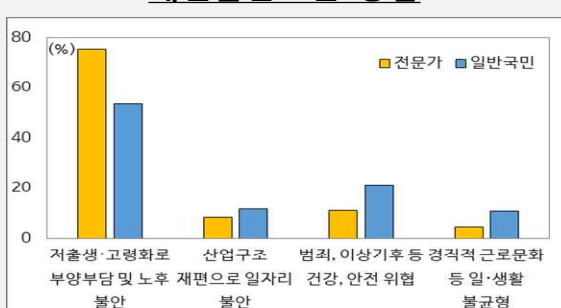


대내위험요인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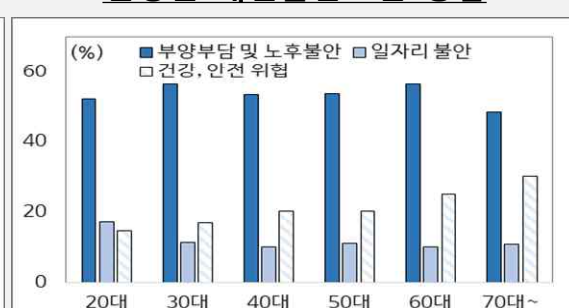


③ (개인불안요인)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불안'을 전문가(75.5%), 일반국민(53.6%) 모두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
- 특히, 일반국민은 모든 연령대에서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불안'을 가장 많이 응답

개인불안요인 응답



연령별 개인불안요인 응답



Ⅲ. 중장기 전략 기본방향

□ (비전)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혁신과 격차 완화로 삶의 질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 마련

- 혁신은 기술발전과 소득증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는 다시 근로의욕 향상·잠재역량 발현으로 생산성 증대
- 인구축소 사회 진입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인재의 질 제고로 지속 성장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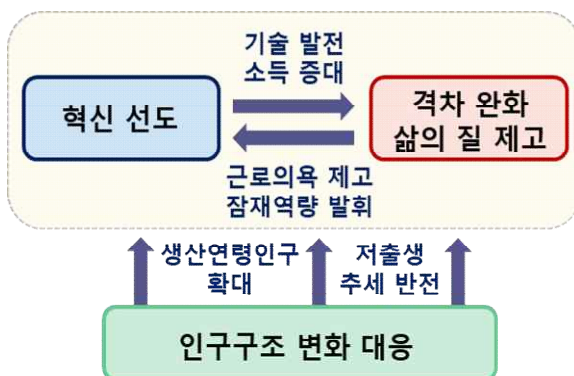
□ (목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혁신 선도, 격차 완화 설정

① **인구구조변화 대응** 現 경제·복지 시스템 下 이미 진행 중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추세 반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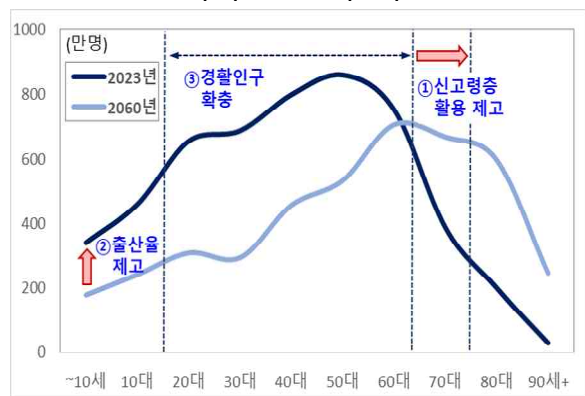
- **신고령층 활약** 지원으로 사실상 생산연령인구의 범위를 확대(예: 69세까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

* 69세까지 경제활동 확대시 노인부양비를 '30년대 초반까지 현재수준으로 유지 가능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3.12)

-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형성하여 '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통계청 고위추계) 달성
- 여성·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 제고**로 **경제활동인구 확충**

② **혁신 선도** 혁신동력과 관련된 핵심 영역의 생산성 제고 및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으로 경제 역동성 제고

- AI 등 디지털대전환(DX)·기후위기 대응(GX), 신산업 육성, 中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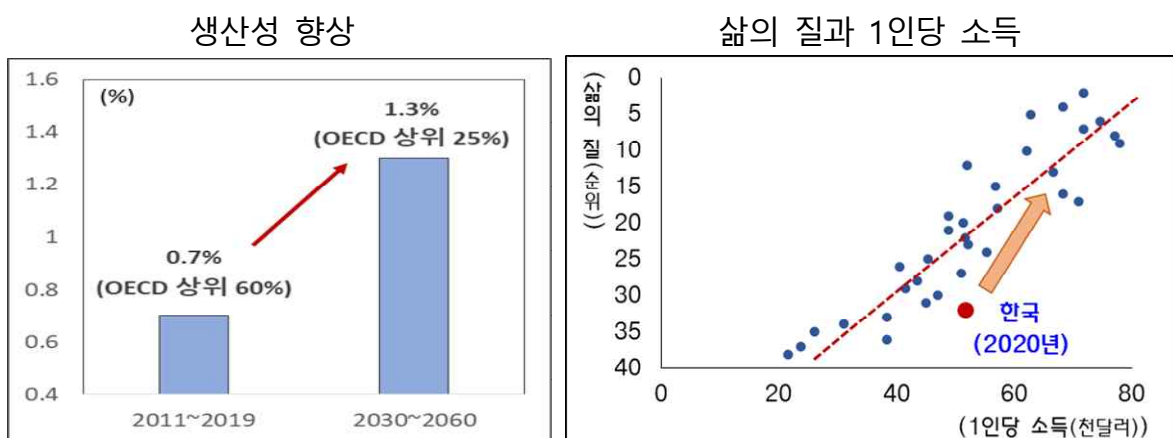
* 전체기업 종사자의 81%를 차지하는 中企 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수준에 불과

- 현재 OECD 국가 상위 60% 수준(0.7%)인 **중요소생산성**을 OECD 국가 상위 25% 수준(1.3%)으로 향상

③ **격차 완화** 노후소득·디지털·기후·지역 등 부문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보로 국민 삶의 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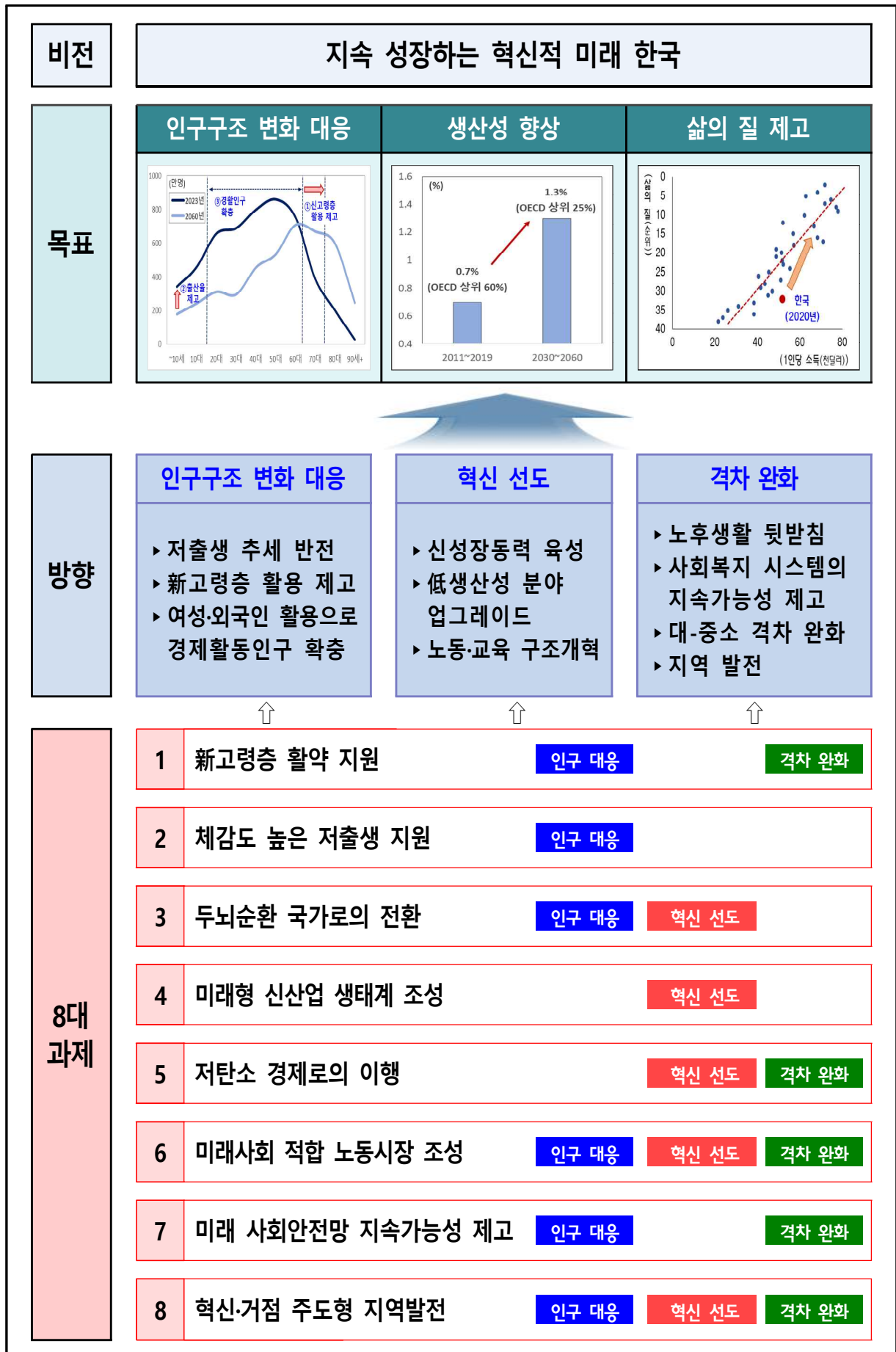
- 노후소득 크레바스 개선, 中企 디지털 전환 지원, 기후적응 강화,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 발전 등 추진
- 경제 성과(1인당 GDP)에 부합하는 **높은 만족도*** 달성

* 삶의 질과 1인당 소득 간 추세선 이상의 궤도로 삶의 질 제고



* 자료: KDI('24)

*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20)



IV. 중장기 전략과제

1

新고령층 활약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건강하고 근로의사가 강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차원의 지원이 요구

* '23년 기준 총인구 중 제1차 베이비부머('55~'63년생) : 705만 명, 13.7% 차지
제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 954만 명, 18.6% 차지

- 아울러 노인빈곤율은 차츰 개선되고 있으나, 미래에도 여전히 OECD 평균('20년 14.2%) 대비 높아* 취약계층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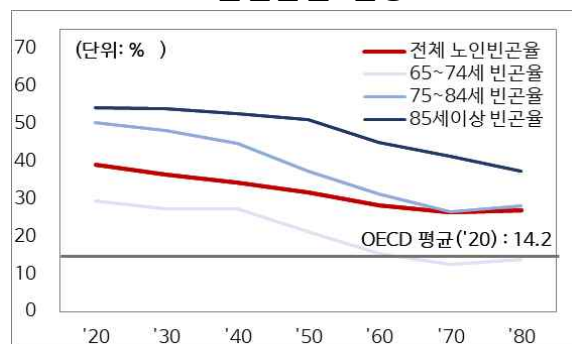
* 노인빈곤율 전망(국민연금연, '22) : ('22) 38.1% → ('85) 29.8%

근로의사, 건강수명 등 연령인식

고령층 평균 근로희망 연령	73.3세
질병·장애기간 제외 건강수명	73.1세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71.6세

* 자료: 통계청('24), WHO('19), 복지부('23)

노인빈곤율 전망



*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2)

2

중장기 정책과제

〈 정책 방향 〉

- ❖ 근로의사가 높고 경험·역량이 풍부한 新고령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연계 확대에 집중하고, 소득보장체계 강화로 체계적 노후대비 지원
- ❖ 건강·수명 개선에 따른 액티브 시니어 등장,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노인연령 상향 검토

① 新고령층에 대한 계속고용 지원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정년연장·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알선·전직훈련 등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도 발굴·확대

② 노후소득보장체계 제고로 격차 완화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로 튼튼하고 안정적인 노후 뒷받침
 - 국민연금 관련 취약계층에 대해 가입을 지원하고, 부분연금제 도입(수급 개시前 연금 일부수령 선택 가능) 검토 등 다양한 노후소득 마련 경로 제공

* (해외사례 : 독일) 노령연금의 1/3, 1/2, 2/3 금액을 조기 수급 가능토록 해, 고령층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부족한 근로소득을 부분연금으로 보완 가능

-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개인연금 기능 강화** 및 부동산 자산 연금화 촉진*** 등으로 사적연금 역할 강화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 누수 방지, 운용수익율 제고 등

** (예) 소득수준·연령 등 가입자 특성 고려한 혜택 차등화로 개인연금 가입을 보완

***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이 82.4% 차지('21), 자산 연금화시 노인빈곤율 14~16%p 감소 추정(KDI, '23)

- OECD 대비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단계적 보장 확대 및 관련제도와 유기적 연계*

*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 확대('24년 32%),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관련 제도와 연계 강화 등

-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 차감액*에 대한 추가 지급 방안을 검토

* 기초생보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해 감액 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지급 효과가 없는 상황

③ 노인 복지를 감안한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 고령자 고용연장효과, 노인빈곤율 등을 종합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및 단계적 로드맵 검토

- 경로우대제 등 사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관련 대상 연령 상향 공론화를 추진

2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15년 이후 출산율 급락은 ①有배우 비율 감소(비혼·만혼)* + ②有배우 출산율 급감(특히 첫자녀)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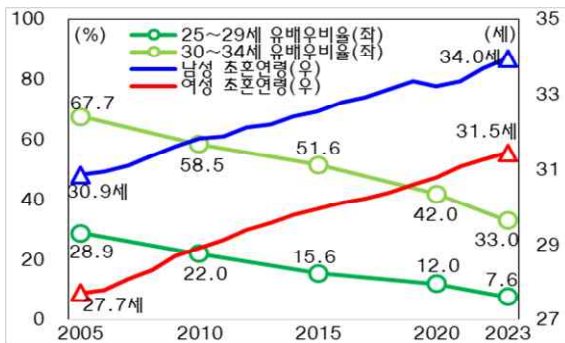
* 혼인 건수(만건): ('00)33.2 ('10)32.6 ('15)30.3 ('20)21.4 ('21)19.3 ('22)19.2 ('23)19.4

** '12~'21년 출생아수 변화요인(이철희, '23): ①(有배우 비율 감소) 48%

②(有배우 출산율 감소) 41%(첫째아: 58%) → 결혼·첫아이 출산 지원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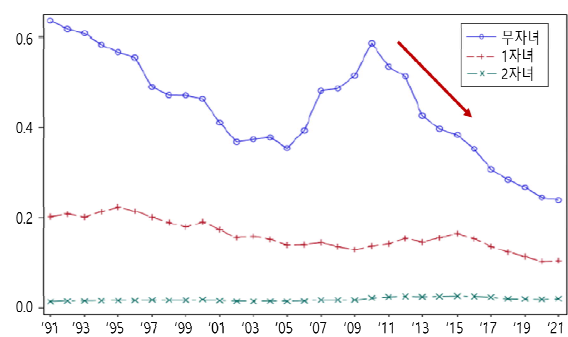
- 결혼·첫 아이 출산 및 돌봄까지 체감도 높은 지원이 요구되나, 중복·산발적 지원으로 효과성이 낮고 결혼 페널티에 대한 인식 여전

연령별 유배우 비율 및 초혼연령



* 자료: 통계청

25~39세 유배우여성 자녀수별 출산율



* 자료: 이철희('22)

2

중장기 전략과제

< 정책 방향 >

- ❖ **촘촘하면서도 효과성 높은 '결혼-출생-돌봄' 국민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 도모**

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 (1단계)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 통·폐합해 가칭「가족수당」 신설
→ 지출선택권 및 정책체감도 제고

* 통합대상 현금성 지원(예): [재정]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세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 (2단계) 저출생 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토대로 소득·자녀수별 차등 지급* 등 효과성 제고 방안 검토

* (해외사례 : 佛 가족수당) 소득수준과 자녀수(두자녀 이상)에 따라 차등 지급

② 탄탄한 돌봄체계 구축

- ① (초등) 국가 차원의 초등 늘봄과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청별로 학생·학부모 수요에 맞는 늘봄과정 운영체계 정립

* (예) 정규교육 : 표준화된 교육으로 기초·포용역량 등 공통소양 배양
 늘봄교육 : 예체능, 진로·적성 탐색 등 특색 교육경험 제공 및 재능개발 지원

- ② (지역) 여러 부처가 분절적 운영중인 지역 돌봄사업 연계·통합*

* (現)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다함께돌봄사업·지역아동센터(복지부) 등
 → (개선 예) 사업 통합, 기관·인력·프로그램 등 연계·통합 운영

- ③ (가정) 민간 돌봄인력 관리 강화(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등)를 토대로 정부·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용 '통합바우처*' 도입 검토

■ 외국인·고령자(노인일자리 예산 활용) 등 돌봄인력 공급 확충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시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용을 허용해 이용 비용 경감

< 보육·교육·돌봄 지원체계 >

현 행					개 편
구분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	개편 방안
돌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과정 (복지부·교육부)	늘봄학교 (교육부)		늘봄학교 내실화
	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 (여가부, 0~12세 대상)			⇒ 통합바우처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18세 미만 대상)			⇒ 부처·사업 등 연계·통합 * 기관, 인력, 프로그램 등 연계·통합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6~12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가부, 초4~중3 대상)		

③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제고

- 주거 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에 있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여 결혼을 장려하는 방향(결혼 메리트)으로 관련 정책 재설계

* (예) 주말부부 등 부부가 따로 거주시 부부 모두에게 월세 공제 적용 등

- 아동 복지 등을 고려해 동거·비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지원 제고

* (예) 일정 요건의 동거에 대해 자녀 출산·육아 등에서 충분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 검토

3

두뇌순환 국가로의 전환

1

현황 및 필요성

□ 전세계가 첨단산업 인재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으나,

* (美) 「반도체 육성법」 제정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132억 투자('22~'27)
(EU) 'Horizon Europe 마리퀴리 액션'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66.0억 투자('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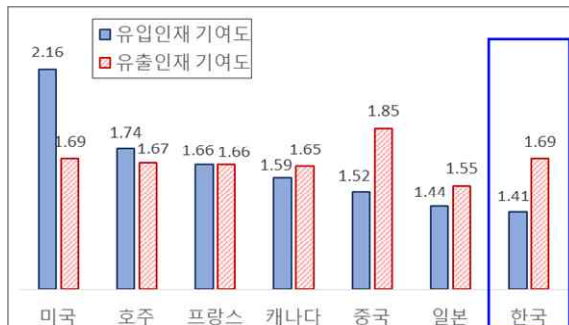
○ 우리는 낮은 인재유치 매력도, 고급인재 유출* 등으로 핵심 인재 확보에 난항 + 전문인재 유치 성과 미흡**

* ①국가 인재유치 매력도(IMD, '23): 43위/67개국, ②두뇌유출지수(IMD, '23): 36위

** 외국인 전문인력 수 증가('12→'23, 만명): (韓) 5.0 → 7.2 (日) 12.4 → 59.6
인구대비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 , '23): (싱가포르) 3.47('22) (日) 0.48 (韓)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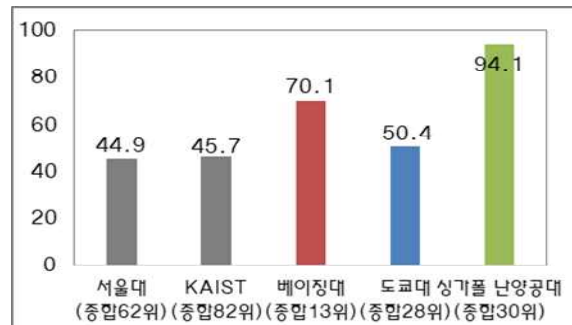
○ 국내 주요 대학의 글로벌 협력은 상대적으로 경직적이며, 재외 동포 등 해외 인적자원 활용도 부족

국가별 유출·유입 인재 기여도



* 자료: OECD(글로벌 과학저널 기여도로 측정)

세계 대학순위 및 국제화 지수



* 자료: THE 세계 대학순위('24)

2

중장기 전략과제

〈 정책 방향 〉

❖ **유입**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국내 우수인재 복귀 + **연결** 글로벌 우수인재간 연계·협력 + **진출** 우리인재의 해외 활약 → '두뇌순환' 국가*로 전환

* 국내·외 우수인재가 물리적 장소와 관계없이 활약하여 우리경제에 기여

❖ 산업·기술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이민제도 개편 → 선진국형 이민체제 마련

1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인재 리쇼어링

- '첨단분야 우수인재* 및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하여 국내입국, 체류편의 제공을 통한 인재 유치지원 강화

* 첨단산업 해외고급인재 대상(글로벌 공대 톱100대 석·박사 졸업, 글로벌 톱500 기업에서 8년이상 근무, 프로젝트매니저 경험), 첨단산업 취업 확정시 발급(K-tech Pass)

** 글로벌 톱200대 졸업생 대상, 취·창업 이전에 구직·학업 등 자유로운 활동 허용

<해외 사례>

- ▶ **[일본]** 글로벌 톱100 대학 졸업생 대상 최장 2년간 취·창업 활동(가족동반 可) 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인재 제도(J-Find)' 신설('23.4)
- ▶ **[영국]** 글로벌 톱50 대학 졸업생들이 2~3년 거주하며 첨단산업 분야(반도체·바이오 등) 취업 활동 할 수 있도록 '고도인재비자(HPI)' 신설('22.5)

-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 외국인학교 입학특례 등 자녀교육 지원, 주거지원 등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정착패키지 지원(안) >

구 분		내 용
①세제혜택	근로소득	▶첨단산업분야 해외우수인재(K-tech Pass 소지자)에게도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50% 감면 적용(10년간)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검토
	국제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등 특례 적용
②자녀교육 지원	자녀돌봄	▶부모·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방문동거(F-1) 비자 동시 발급
③배우자 취업지원		▶전문직 등 국내 취업 지원을 위해 동반비자(F-3)의 취업 범위 확대
④주거 지원		▶전세대출·보증한도 내국인 수준 확대(現2억원 →改5억원), 전담 글로벌 공인중개사 매칭
⑤정착 컨설팅		▶전담기관(KOTRA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이 비자 준비부터 정주(의료, 자녀교육, 세금, 한국어 교육 등)까지 지원

- 두뇌유출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유출 인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 관리하는 한편,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 이주 국가, 이주 동기, 전공 분야, 규모, 한국-해외에서 받는 대우 비교 등

- 해외 체류중인 우수인재의 본국 귀환 유도를 위해 소득세 50% 감면(10년)* 연장 검토 및 학계·연구계 등 복귀 지원**

*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술개발 경력자 대상, '25년 일몰 예정

** (예) 공공연구기관에 취업연계 리서치펠로우, 우수 연구자를 위한 리서치 체어 신설 등 (해외사례: 中 치명계획) 해외인재·국내유턴인재 대상 학계 복귀 및 연구비 지원

② 글로벌 우수인재간 연계·협력 강화

- 우수 과학기술인재간 공동·위탁연구 등 협력형 기술개발 강화
(Brain Pool, Brain Pool+, Brain Link 등)
- 재외한인*을 국내·외 인재·기술 교류의 '상설 민간대사'로 활용하는 한편, ODA를 활용하여 親韓 외국인재 육성 확대**

* 재외동포 현황(만명, 외교부): ('15) 729 ('17) 754 ('19) 749 ('21) 732

** 외국인재 유입형 ODA 확대, 본국귀환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지속 관리 등

- 핵심인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기업 인수지원으로 기술력 제고 및 기업 혁신 도모

③ 우리인재의 국경없는 활약 지원

- 청년의 해외취업과 조기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경력개발 시스템에 해외취업 경력 연계 등 해외 취업자 사후관리 강화

* 청년 해외취업 사업(K-Move스쿨) 내실화 및 참여 경력을 국내 취업시 활용지원 등

- 한국인·국내법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확대 등으로 경쟁력 강화 및 국내경제 기여 유도

* (現) 글로벌팁스: 20만불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대상, 3년간 최대 6억원 지원

④ 중장기 이민제도 개편을 통한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구축(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하고, 인력수급 전망 등을 토대로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 마련

* 비자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등을 활용해 검토

- 취업비자체계를 정비*하고, 외국인재 인재풀 구축 및 구인·구직 플랫폼과 연계를 통해 외국인재-국내기업간 정보접근성 제고**

* (現) ①직종산업 혼재해 복잡, ②담당자별 비자발급 실무기준 상이해 불확실성 야기

(改) ①이민자 유입관리 정착정주 고려해 수요자 중심 정비 ②비자 발급 승인거부 세부기준 공표

** (예) 지방 중소·중견기업 수요 기반으로 해외전문기술인력 현지 발굴·매칭·유치 지원

- 영주 비자제도 개편 및 사회통합 제고로 우수 외국인재는 정주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비전문 외국인력은 숙련화

4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1

현황 및 필요성

- 규제 경직성*, 도전적 투자 저조 등으로 미래 산업환경 급변에 대응한 창의·혁신이 제한적**이며 경제 역동성이 저하

* 규제 수⁽²³⁾ 한계 :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185개 → 2조원 209개 → 5조원 274개 → 10조원 342개

**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우리기업은 1개에 불과('22)

- 대학은 정원·재정 등 규제 경직성, 낮은 투자수준*으로 경쟁력 저하**

*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573으로 OECD 평균(\$20,499) 대비 66% 수준

** 대학 교육경쟁력 순위(IMD, '24) : 67개국 중 한국은 46위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디지털 전환 수준*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규모화 지원이 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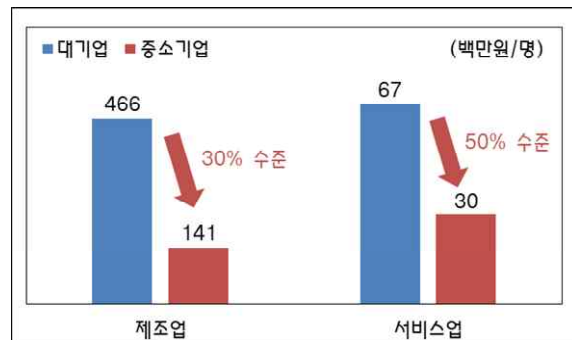
* 디지털 전환 추진비율(산업기술진흥협회, '21) : 대·중견기업 48.9%, 중소기업 29.9%

주요국 규제강도 순위

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20등 /38개국
WEF 국제경쟁력 보고서	141개국 중
규제 관련 법·제도 효율성	67위
정부 규제의 부담	87위

* 자료: OECD('23), WEF('19)

중소-대기업간 생산성 격차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23)

2

중장기 정책과제

< 정책 방향 >

- ❖ 기술·산업 환경 급변에 대응해 민간의 창의·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활발한 투자 및 기업 진출입 여건 조성
- ❖ 디지털 제조혁신, 규모화,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①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 친화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 미래 잠재력이 크나 위험도가 커 민간 R&D가 어려운 분야 선별해 정부 지원 집중 + 실패 용인하는 성과체계로 개편
-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초기성장기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비중 확대, 우량·고신용 성숙기 기업은 민간금융 중심 지원으로 개편*
 - *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지원자금 비중 상향, 전체 보증 대비 기술보증 잔액 비중 확대 등
 -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 조성** 등 혁신 모험자본시장 기반 확충
 -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벤처·스타트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 **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투자계약서 도입, 벤처펀드 출자자 수 제한 상향 검토 등
-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 위해 규제 개선 및 사업재편 지원
 - 업종별·기업규모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
 -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대기업집단 지정시 적용 규제 완화 등
 -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고부가가치·노동절약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 및 근로자 전직훈련 등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② 자율성 및 연계성을 바탕으로 대학을 혁신기지화

- 규제 완화, 재정 확충 등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역할 강화
 - 첨단 분야 정원규제 특례 부여* 등 정원규제 완화로 인력수요 대응
 - *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원활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정원 증원요건 완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잉여재원 활용해 대학 지원예산 법적기반 마련** 등 통해 대학재정 확보
 - * (現) 내국세 총액의 20.79% + 교육세 일부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배분 (개선 예) 학령인구 변화, GDP 증가,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총액 결정
 - ** (예) ①3년 한시 제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25)」을 일몰 연장
②대학에도 교육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 대학 단위 묶음예산(Block-funding) 연구 지원* 활성화를 통해 연구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연구에 안정적으로 집중하도록 지원

* 중앙정부 총액 결정 → 대학에 예산집행 자율권 부여 개인 연구실이 아닌 기관 전체 차원 투자가능

○ 수요자 중심 인재 양성·활용을 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강화*

* 기업 수요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실험실 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기반한 업종별 '산학프로젝트' 및 석박사 인재양성 확대 등

-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위해 산·학·연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인프라 구축**

* 기업 필요 연구주제를 대학에서 연구하는 협력모델 개발, 산학협력 교수 겸직 활성화 등

** 교육·연구·취창업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첨단분야 클러스터' 조성, 시설 및 부지 개방·공유 활성화, 산·학·연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

③ 중소기업 혁신 지원

○ 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자동화) 모든 단계를 지원*

* 수요→역량평가→디지털전환(자동화)→사후관리→성과확산→추가 수요발굴→...

- 디지털 혁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자동화 → 지능화 → 자율화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제공

○ 기업규모(매출액·자산 등) 기준 외에 성장성 지표(예: 기술성, 사업성, 매출성장률 등)를 기반으로 한 규모화 지원 확대

○ 특허박스* 등 R&D 지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하고, 사내대학·대중소상생형 공동직업훈련 등 중소기업 인재양성 체계를 확충**

* (現) 중소기업 자체개발 기술의 판매·대여 등에 대해 50%·25% 법인세 감면 중(~'26)

** (예) ①대기업이 운영 중인 사내대학에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 입학 허용(現 당사·하도급·동종업종 근로자 限), ②"대중소상생형" 공동직업훈련에 대기업 참여 유인 제고

1 현황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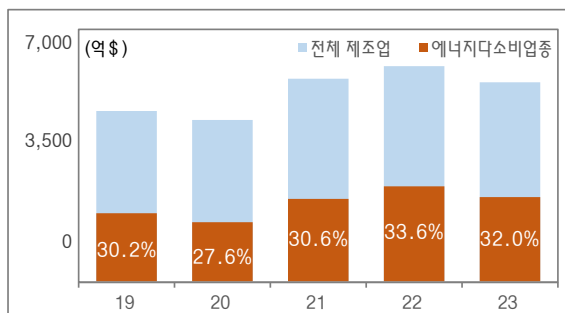
- 불리한 저탄소 전환 여건* 下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 중심의 저탄소 이행 체계 확립 필요

* (산업) 제조업 비중, 주력 수출품 중 탄소다배출 제품 비중 高
(에너지) 좁은 국토면적,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재생e 보급에 불리

- 現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산업 부문만 주로 포괄*하여, 수송·건물 등 부문 및 少배출기업(배출권 非대상) 등의 전환 유인체계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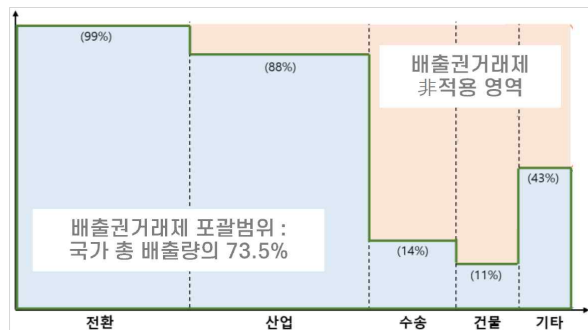
* 각 부문 탄소배출량 중 발전 100%, 산업 88.0%, 수송·건물 12.5% 포괄

우리나라 수출품목 비중



* 수출입통계(산업研) 활용 재구성
(에너지다소비: 철강·석화·정유·시멘트 등)

배출권거래제 포괄 범위



* 기타: 폐기물(85%), 농축산(0%) 등

2 중장기 정책과제

〈 정책 방향 〉

- ❖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선별·집중적 지원체계, 경제적 보상 체계(“다층적 탄소가격체계”) 확충 및 기후격차 완화

1 감축효과에 따른 선별·집중적 지원체계 확충

- 배출권 매각 수입 등 자체 수입기반을 확충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기후대응기금을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전면 재편하고, 기금을 통한 탄소감축 중장기 목표* 설정·공표

* '30년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250만톤 탄소감축 목표 수립

- 저탄소 공정개선·설비전환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탄소감축 효과·자체적 감축노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원대상 선정*

* (現)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환경부)은 중소·중견기업에 우선순위 부여

②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 **공급**적정 배출허용총량 설정*, **수요**다수 참여자가 활발히 거래 하는 개방·역동적 시장化**로 수급불균형 완화

* NDC 이행에 기여하는 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공급 탄력성 제고

** 기관투자자·개인까지 시장참여자 단계적 확대, 유상할당 경매시장 개방 등

- 배출권 시장의 금융기능 강화*로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하고, 정부의 재량개입 최소화**로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 거래시간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연장, 위탁매매 제도 도입

** 최고·최저가 설정 등 시장안정화조치 발동요건·절차 등 제도 개편, 한국형 시장 안정화예비분제도 도입(K-MSR, Market Stability Reserve) 등

③ 기후금융 활성화, 탄소크레딧 시장 기반 구축 등 탄소시장 저변 확대

-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활성화* 및 전환금융** 도입 방안 마련

* 녹색분류체계 개정, 녹색금융 펀드 조성, 보증·이차보전 지원 등

** 전환활동 관련 정의, 범위, 요건 등을 제시하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등

- 녹색 프로젝트 재원 확보, 글로벌 ESG 투자수요 대응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 추진(법·제도 기반 마련, 프로젝트 발굴 등)

- 기업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少배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로서 “탄소크레딧 시장” 조성

④ 녹색전환에 따른 취약지역·산업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격차 완화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축소 등이 예상되는 취약 지역·산업(화석연료 기반)에 대한 지원 확대*

* (예)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대해 중앙-지자체간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방안 마련 등

- 저소득층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등 기후 취약계층의 적응 역량 강화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디지털대전환, 기술패권 등 산업·기술 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 여건 마련에 대한 요구 확대
 - 호봉제 위주*의 임금체계는 노력과 성과 반영이 어려워 인구 감소기 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로서 기능 미흡
 - * (대중견기업) 기업규모별 호봉제 도입 비율(고용부): (10~29인) 42.4% vs (300인 이상) 62.3%
(중소기업)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약 60%의 사업체에서 임금체계 미확립
 -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는 도입되고 있으나, 中企 등은 실제 사용에 애로 및 노동시장 개선에 한계
 - * 근로자 10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 : (대기업) 13.7명 vs. (中企) 6.9명
유연근무제 도입률 : (대기업) 49.3% vs. (中企) 25.0%

2 중장기 전략과제

〈 정책 방향 〉

- ❖ 임금체계 전환, 일·가정 양립 인센티브 제공,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유연하고 생산성 높은 노동시장 조성
- ❖全社会 全生애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술·산업 변화 적응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이동성 제고를 지원

1 직무급제(노동생산성 반영)로 임금체계 전환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임금 정보를 추가해 기업들이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시 활용토록 지원
 - * '24.12월 현재 산업 현장의 직무 1,100개를 1~8 수준으로 분류·고시해 교육 훈련, 자격 신설 등에 활용 중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위해 民間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 인프라 강화*, 公共 직무급 도입 인센티브 부여·업계 확산**
 - * ①통합형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구축, ②주요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③임금체계 개선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
 - ** 총327개 중 109개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24.4월) → '27년까지 200개 기관 도입 목표

② 디지털대전환(DX) 시대에 대응한 근로환경 조성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평가지표 마련 등 법·제도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제공(국가계약 우대, 세제 혜택 검토 등)
- 中企 맞춤형 지원: 일·생활 균형 컨설팅·인프라·자금지원 + 외국인 고용한도(E-9)에 육아휴직인원 반영(中企 인력부족 완화)
- 육아 등 개인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선택근무·재택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제도화 방안” 검토*
- * (現) 근로기준법상 기업 내부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유연근무 가능
→ (개선 예)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 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

③ 생애주기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노동시장 이동성 제고

- 직업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을 포괄하는 전국민·생애주기 직업평생교육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스킬·리스킬 지원
- 평생학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 휴가 제도* 도입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평생학습 휴직 신설도 검토
- * 평생학습 불참요인('24, 교육부) :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54.6%)
- ** 일자리 으뜸기업(매년 100개 기업) 선정시 평생학습 휴가제도 도입기관 가점 부여 검토 등
- 대학의 평생학습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도시 내실화 등을 통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④ 노동시장 제도가 근로유인 및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

- 노동시장 조기 복귀 촉진 방향으로 하한액* 등 실업급여 구조를 개편하고,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 * 최저임금의 80%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일자리 세후소득을 역전
-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에 대해 다양한 경제환경을 고려한 유연성 제고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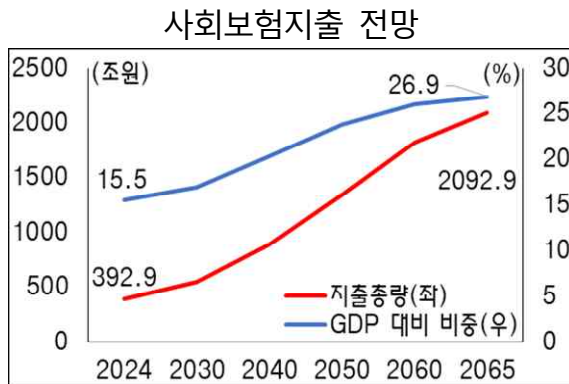
1 현황 및 필요성

□ 고령층 급증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이 급증하며, '60년에는 OECD 대비 고복지국가 수준의 복지지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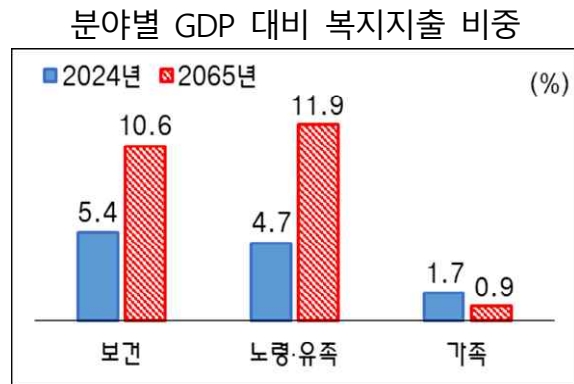
○ 지출 구조조정 없이는 사회보험의 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필요 보험료율*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전망

* 국민연금 : 기금 고갈 이후 부과방식비용율은 30~40%대(이강구·신승룡, '24)

건강보험(% 예정치) : ('23)7.09 → ('32)8.93 / 장기요양보험(% 김용하) : ('20)0.68 → ('55)5.0



* 자료: 복지부('24)



* 자료: 복지부('24)

2 중장기 정책과제

〈 정책 방향 〉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구조조정을 통해 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및 신뢰 제고

① 지속가능성 제고 및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추진

- 국민수용성 등 고려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신뢰 제고
-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 강화

② 이용·보상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 (국민 이용체계 개선) 중증도 등에 맞는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 의료기관 단계에 맞는 의료이용경로 재정립, 의사 등 전문가가 조정하는 진료의뢰 시스템으로 전환 등 의료이용단계 개선
 - 필요도 기반으로 본인부담차등제를 강화*하고,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 조정

* 과다·부적정 이용 및 경증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 등

- (의료 보상체계 개선) 의료 보상 통합 개선을 통해 가치 기반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지출의 효율적 관리 유도
 - 환산지수 개편으로 필수의료·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 + 高가치·필수서비스에 보상 강화, 지불단위 다양화·포괄화
 - 先가격(지출) - 後보험료율(수입) 결정 방식에서 先보험료율(수입) - 後가격(지출) 혹은 동시결정 방식으로 재정관리방식 전환

③ 노인 돌봄·요양 수요급증에 대응해 유기적 돌봄체계 구축

- (돌봄체계 개편) 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가돌봄 - 요양시설 - 요양병원 간 이용대상 및 기능 명확화
 - 돌봄·요양 필요도에 맞는 서비스를 정확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본격화
 - 요양병원으로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동일등급內 시설-재가급여 상한액 격차를 완화해 재가돌봄 이용 유도

* 요양시설 확충, 다양한 돌봄형태를 개발해 돌봄수요 대응 등

- (돌봄공급 확대) 돌봄기기 개발·보급, 외국인 인력 점진적 활용 확대
- 미래부담 급증에 대응해 현세대에서부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준비금 조성* 등 재원 확보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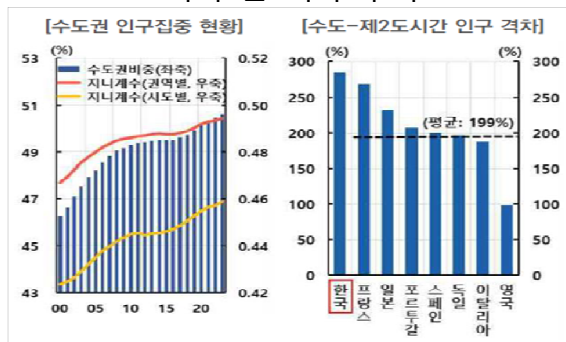
* (해외사례 : 독일 장기요양준비기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자가 되는 '35년부터 활용하기 위해 '15~'34년까지 매년 전년도 소득의 0.1%를 별도로 적립 중

1 현황 및 필요성

□ 제조업 → 첨단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는 혁신기업·핵심인력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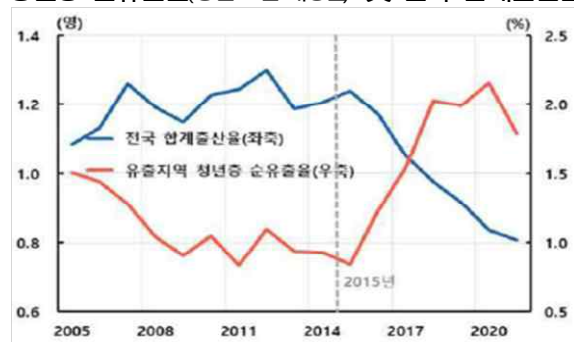
○ 수도권의 집값 폭등, 출산율 감소 등 집적 불경제 증가 및 비수도권의 산업환경 악화, 지역경제 위기로 영향 확산

지역 간 격차 추이



* 출처: 한국은행('23), OECD

청년층 순유출율(동남호남대경관) 및 전국 합계출산율



* 출처: 한국은행('23), 통계청

2 중장기 정책과제

〈 정책 방향 〉

❖ 권역별 거점을 육성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한 생활인구 활성화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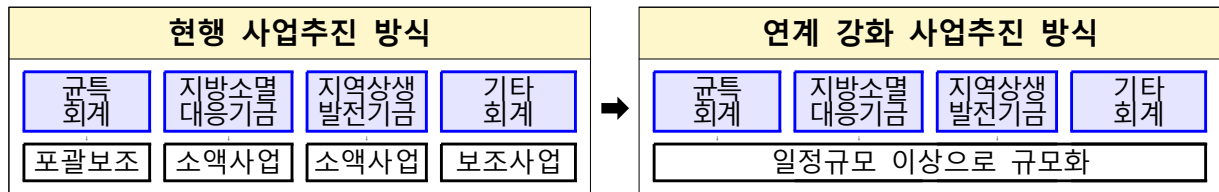
○ (거점개발) 중복·난립한 특구 정비·효율화, 기회발전특구-교육 발전특구-RISE체계(글로벌대학 포함) 등 간 시너지 강화

○ (행정체계 개편)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초광역권 형성, 행정구역 통합* 등 지방행정체계 개편

* (예) ①거점 도시 조성, ②과소 시·군 통합, ③자치구 간 통합 등

○ (회계·기금 정비) 균특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 기금 등 회계·기금 간 체계적 역할 분담·연계 방안 검토

< 회계·기금간 연계 예시 >



② 지방을 혁신의 선도기지화하여 양질의 지방 일자리 창출

- 국민적 공감대는 조성되었음에도, 기득권과의 이해충돌 등으로 개혁이 어려웠던 핵심규제를 지방에서 혁파
 - 지방이 지역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案)을 직접 설계* (규제해제요구권 신설) 혁신적 新산업·서비스 도입·확산 추진
- * 규제 예 : (교통서비스) 플랫폼 운송사업 진입장벽(최소차량대수 등) 규제 (요양시설) 요양시설 운영 관련 엄격한 의무요건으로 규제
- 기회발전특구, 인구감소지역 등 이주·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혜택 확대

③ 생활인구 중심의 지방행정 촉진

- 주민 외 체류인구에 '부거주지' 등록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복수주소 도입* 관련 제도 개선 검토(관련 법령 개정 등)
 - * (해외사례 : 獨 복수주소제) 주거주지와 별도로 6개월 초과 거주시 부거주지 신고 의무, 부거주지 임대료·왕복 교통비 등 소득세 공제 혜택, 부거주자에도 지방세 부과 가능
- 지방 산단(일자리)·세컨드홈(거주) 등 연계*해 고학력 수도권 은퇴자**의 고향 이전·정착 촉진 및 안정된 귀향생활 지원
 - * (예) 산단 수요에 맞춰 수도권 은퇴자를 모집, 인근에 타운하우스(세컨드홈) 등 제공
 - ** 40세 이상 인구는 수도권 → 비수도권으로 순이동 중(연평균 2.3만명, '18~'23, 통계청), 인구감소지역 유입인구의 학력 수준은 전국 평균 대비 높음(보사연, '23)
- 인구감소지역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장성·규모화 가능성 반영* 등 인구감소지역 선정·분류체계 개편을 검토
 - * [선정기준] (現) 출생률, 인구밀도 등 → (개선 예) 1인당 GRDP, 산업다양성 지수 등 반영
- ①복수 인구감소지역, ②인구감소지역 + 여타 지자체 등 복수지역 공동개발을 우대하여 지자체간 협력 및 효율적 지역 개발 지원